

제429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2일(화)

장 소 국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 국방부 소관
 - 병무청 소관
 - 방위사업청 소관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상정된 안건

-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2
 - 국방부 소관
 - 병무청 소관
 - 방위사업청 소관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10시01분 개의)

○소위원장 강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소위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한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병무청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오전까지 결산 심사를 완료해서 그 결과를 오후에 열리는 전체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 내에 결산 심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결산 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서면질의를 토대로 정리된 심사자료를 각 항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항목별로는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각 항목에 대한 시정요구 내용과 시정요구 유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의 유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상·징계·시정·주의·제도개선, 5개 기

준으로 분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은 수용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되 불수용할 경우에만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측의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국방부 소관

나. 병무청 소관

다. 방위사업청 소관

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10시03분)

○소위원장 강대식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 등 4개 소관기관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소위에서 심사가 보류되었던 국방부 소관에 대한 계속심사를 하겠습니다.

차관님, 보류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보류되었던 연번 18번, 주요 기관 교육용탄약을 사업 조정과 전용을 통하여 소형자폭드론을 구매한 건 관련해서 국방부는 지적해 주신 시정요구사항을 적극 수용을 합니다. 동시에 건의드리는데 사항은 시정과 이 시정을 담보하기 위한 부대의견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승찬 위원님.

○부승찬 위원 사실 다른 사업들과는 달리 소형자폭드론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거 심각합니다. 아시겠지만 5000% 이상을 이·전용을 한 거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어떤 단일 사업으로서 이렇게 5000% 이상 가는 사업은 없어요. 그리고 국회 보고나 심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습시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는 저희 예산소위에서 국회 심의나 보고 없이 그냥 독자적으로 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전부 감사원감사 의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관례, 습관처럼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회는 결국은 예산과 입법과 관련된 기관인데 예산이나 결산과 관련해서 전혀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견제를 하지 못한다면 일종의 권력기관으로서, 입법기관으로서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원 감사를 지속적으로 주장했는데 주의 선에서……

○소위원장 강대식 시정으로.

○부승찬 위원 시정으로 가는 거예요?

○소위원장 강대식 자기가 시정으로……

○부승찬 위원 아, 그래요. 좌우지간 이것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
고요.

다시 한번 속기록에 남기지만 국회 심의나 보고 없이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는 정말 국회에서 철저히 걸러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희 위원 위원장님, 저도……

○소위원장 강대식 황희 위원님.

○황희 위원 차관님, 부승찬 위원이 왜 이러냐면 국회라는 곳이 증액권이 없잖아요, 그
렇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황희 위원 감액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감액 그다음에 감독하는 그
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증액 없이 감액만 하는데 거기다 대고 국회에, 감액권밖에 없
는 입법기관에다가 보고도 않고 심의도 않고 증액을 이렇게 큰 차이로 하니까 이거는 최
소한 국회에 대한 기본적인 존재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부승찬 위원이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한 부분들이 많이 있
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면서 앞으로 할 때 미리 보고하
고 통제를 받도록 하는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국방위 차원에서만 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제기됐으면 차제에, 사실은 예산의 이·전용은 지난 수십 년간 모든
부처에서 다 일어났던 거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진짜 문제가 된다면 차제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전 부처에서 공히 적용될 수 있는 이·전용의 한계라든가 또 보고를 하
게 되면 어느 정도 수준일 때는 반드시 보고를 하고 논의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 규정
을 만드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차관님,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 잘 들으셨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꼭 우리 국방부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타 부처에도 이·전용 금액이
현격히 차이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이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다수의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우선 모범적으로 국방부만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셔서 이런 사안들이 발생했을 시에 꼭 사전보고, 사전협의 이런 게 꼭 있었으
면 하는 그런 말씀이니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강대식 부승찬 위원님.

○부승찬 위원 국방부 3번 항목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질의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시조직 운영과 관련돼서요 지금 국방부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해요. 어제 대장급 인사도 나고 그다음에 줄곧 한시조직들을 한기호 위원님도 강하게 질의 및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사실은 비정상 조직 운영과 관련돼서 차장제를 뒤서 운영하는 게 맞나 싶어요. 한시조직 운영하는 데 차장 조직을 두고 운영하는 게, 장군들을 국방부에 근무시키는 게 맞나 싶어요.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나 문민장관이 지금 오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 한시조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실 건지, 사실은 법을 만들어 났으면 법령에 기초해서 조직도 운영이 돼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그냥 눈 감고 넘어가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계속해서 감사원 지적이나 다른 기타 감사에서도 지적받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장군들이 모자라다 계속하면서 이런 한시조직을 계속 운영하실 건지.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지금 내란에 관련돼서 정책기획차장인가요?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지난번 방 모 준장이 연루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도 이런 말까지는 드려서 죄송한데 할 일이 없으니까 롯데리아 간 것 아니에요. 이런 한시조직을 과연 운영할 거냐, 결국은 또 이게 군이 정치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당하게 이제는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정상 직제로 가시든지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뭔가 개혁이 보이고 이재명 정부나 문민장관 취지에도 맞는 게 아닌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갑수 군수관리관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시지요. 앞에 나오셔서 하세요.

○국방부군수관리관 이갑수 국방부 군수관리관입니다.

지난주에 국제회의 관련해서 어떤 국회의 사전 승인 없이 승인 절차가 미흡한 가운데 해외출장을 다녀와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됐습니까?

○부승찬 위원 차관님, 질의 답변.

○국방부차관 이두희 차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대로 저희들은 이 요구 사항을 겸허히 수용을 해서 행정안전부와 정상적인 협의 절차를 거쳐서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정식 직제에 반영한다든가 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서 조치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고, 지금처럼 비공식 파견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황명선 위원님.

○황명선 위원 황명선 위원입니다.

18번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은 3억 8600만 원이었는데 결국은 204억 9000만 원의 내역 변경을 통해서 사업이 집행이 됐습니다.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국회 예산 심의·확정 권한을 침해하는 그런 신규 사업이지요. 아까 시정이나 주의나 이런 정도의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아주, 국가재정법 제45조를 아주 심각하게 위반한 그런 내용이라고 봐 집니다.

예를 들면 3억 8600만 원, 한 4억 정도 되는 이런 예산에 예를 들면 1~2억이 더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전용이 됐거나 이런 정도라고 하면 우리들이 납득이 되고 주의나 시정조치를 좀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한 70배, 이런 정도의 의도성이 있는 예산 전용이거든요. 국가재정법 제45조 세출예산 목적 외 집행금지 원칙을 아주 굉장히 중대하게 위반한 사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시정조치가 아니라 징계를 반드시 해서 다음부터는 이러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무리한, 굉장히 많은 70배 이상 되는 예산을 전용하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권한을 아주 중대하게 침해한 그런 내용이어서, 다른 위원님들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단호하게 이러지 않도록 저는 징계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저번 소위 심사 때 황 위원님께서 참석을 안 하셔서, 이 연번 18번 문제 가지고는 굉장히 제일 오랜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많이 했던 그런 사안이고 그래서 부승찬 위원님께서 감사원감사까지 계속 주장을 하시다가 국방부 측의 어떤 내부적인 이야기를, 피치 못할 사정 그런 거를 이야기를 다 듣고 징계 수위를 어느 정도 조정을 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드리고, 황명선 위원님께서도 단체장을 해 보셨던 위원님이기 때문에 예산 체계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밝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차관님 이야기가 있었지만 향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또 부승찬 위원님이나 황희 위원님이나 황명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하고 부대의견까지 달아서 지금 시정조치를 했던 거니까 이번 한 번은 황명선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명선 위원 아까 임종득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의가 돼요. 이런 사례들이 정부 각 부처에서 예산이 전용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이런 것을 감시하고 지적하고 요구하고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의 역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위원장 강대식 맞습니다.

○황명선 위원 이것 외부에서 누가 보더라도 동의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앞서 강대식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저도 예산을 편성도 하고 했던 그런 단체장의 역할을 했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시정조치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의도성이 다분한, 국민들 누구나 이 예산 전용한 내용들을 보면 ‘국회의원들 뭐 했어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납득되는 금액들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차관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위원님 잘못했습니다. 명백하게 잘못했고 여러 가지 내부 사정이 있었음은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사유가 있다면 사전에 국회 상임위에서 보고를 하고 또 양해와 승인을 득하고 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예산결

산 과정에서야 이것이 불거져서 문제시됐다는 것은 잘못이 큼니다.

그 부분을 아주 저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전후 사정을 철저히 밝혀서 내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또 감사관실을 통해서, 정책 감사를 통해서 또 바로잡을 부분들은 바로잡고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경계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황희 위원님.

○황희 위원 민주당 위원님들 그런 시각이 조금, 이걸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3억이었다가 209억까지 이·전용된 예산 차이 이것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폭드론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시급성 이래서 이렇게 좀 해 봐라 해서 할 수도 있다고는 보는데 이게 좀 그런 시각도 혹시 있지 않을까, 위원님들 중에는. 이게 계엄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계엄 상황과 맞물려서 최근에 여러 가지 관련된 이슈가 있었잖아요. 혹시 그런 이슈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준비된 내용들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차관님이 차제에 민주당 위원님들에게 그것은 이러 이러한 내용 때문에 이렇게 이·전용이 된 것이다, 그다음에 앞으로는…… 사실 이 자체만 두고도 좀 말이 안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의구심도 있고 이런 예산을 증액권이 없는 국회에 이렇게 막 마음대로 얘기도 안 하고 보고도 안 하고 증액하는 건 그 자체로도 문제가 크고 두 가지가 있으니까 앞의 부분만 조금 소명이 되고 설명이 되고 또 필요한 부분이 다 그러면 진짜 차제에는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진짜 이건 심각한 거지요. 그러면 어떨까……

○황명선 위원 국방부의 태도가 참 굉장히 아주 잘못됐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일을 하다 보면 예산의 전용이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상임위에 아니면 국방위 위원님들한테 필요성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생략이 됐고 결산 과정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왜 국방위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들이, 과거에 예산을 전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이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과 요청들이 없고 결산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굉장히 큰 문제 아닙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황명선 위원 저는 정말 위반 자체가 범죄행위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도성을 갖고 했다. 왜 보고를 안 해 줘요? 그렇지요? 필요하다라고 하면 예산 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여건들이 있어서 국회 국방위,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설명과 요청들을 하면 이게 국익에, 국가와 국방부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같이 지혜를 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황명선 위원 그런데 그런 절차가 다 생략이 되고 결산 과정에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이건 의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동료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은 그냥 주의나 시정조치가 아니라 강력하게 징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다시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소위원장 강대식 좀 전에도 제가 차관계 당부의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는 저번 결산심사 때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갖고 했었는데 황명선 위원님께서 부득불 그날 참석을 못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속기록에 보면 잘 남겨져 있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까지 뒤로 미뤄 가지고 오늘 의결을 하려고 이렇게 미뤄 놓은 상황이니까 다시 한번 황명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국방부차관계서도 큰 잘못이었다, 앞으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셨고 또 문제를 굉장히 많이 제기했던 부승찬 위원님께서 부대의견까지 달아서 조치를 그렇게 했으니까 황 위원님께서도 이번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하고 다음에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정말로 엄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이 자리에서 차관계서 꼭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제가 지난번에 부득이하게 못 온 것은 현장 최고위가 있어서 제가 지방에 있어서 못 왔는데요.

참 우려스러운 게 우리 국방부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했는데, 그러나 보고 절차도 생략이 됐고 결산 과정에서 나오고 그리고 국민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이런 증액된 부분이 한 70배에 가까운 정도의 금액인데요.

위원님들 의견에 대해서 제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쁜 선례가 남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굉장히 중대한 사안들을 이해를 구하고 요청하는 대로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라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상임위나 다른 국회 차원에서도 이런 게 용인될 수밖에 없는, 과거의 사례가 있으니, 이런 아주 안 좋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러한 우려가 굉장히 크고요.

국방부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주시면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같이 의견들을 모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제가 한 말씀……

○소위원장 강대식 강선영 위원님.

○강선영 위원 제가 가만있으려 그랬는데, 차관님 이제 처음 회의를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시니까……

지난 결산 때 임종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전용이 1조 8000억입니다. 일반회계 41조 4575억 중에 1조 8000억인데요. 이용한 것이 1293, 전용이 3900, 이체가 98, 이월이 6700, 불용이 약 6000억 원입니다.

제가 예산 편성할 때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건, 26년도 예산편성에 나오겠지만 각 대대급 부대에 전투역량강화비를 일반수용비 항목을 약간 변경해서 대대급에 대대장이 일반 병사들, 간부들 격려해 줄 수 있는 돈이 한 달에 1만 8000원 나왔습니다, 1만 8000원. 대대급 규모에 1만 8000원.

그런데 그것 이번에 214% 올려 가지고, 그것도 항목을 좀 조정해서 했는데 그것 71억이 부족합니다, 71억. 대대장이 부하 병력 전투력 유지하기 위해서 올리는 금액 71억이 부족한데, 지금 이곳에 예결위원님 임종득 위원님, 황명선 위원님 계신데, 그 71억을 못 올리고 있는데 여기 1조 8000억 이렇게 이·전용이 된다는 것은 매우 마음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방사청이라든지 사업하다 보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기타 나머지 부분들은 잘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가장 문제가 뭐냐면 지금 국방부 산하 내에서도 기관별로 어떤 사업 추진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관님, 나중에 한번 짚어 봐 주십시오.

예를 들면 지금 캠프 험프리스 거기 예전에 미군의 아파치가 있다가 한국에서 빼면서 그 지역에 육군에서 집행해야 되는, 육군 공병부가 집행해야 되는 토양오염 복원 공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토양오염 복원 공사를 하려면, 거기에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헐어야 토양오염 복원 공사할 수 있습니다. 토양오염 복원 공사는 육군의 공사비로 들어가 있는데 그 시설을 허는 것은 방사청 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시설을 헐어야 육군의 정비대대가 거기에 들어옵니다. 육군의 정비대대가 이전해야 K-18……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황성에 있는 미군 기지의 KF-21 거기 건물이 들어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육군 사업비, 방사청의 아파치 사업비, KF-21 사업비가 다 물려 있어요. 사업체 다 불러 보니까 각자 자기 얘기만 해요. ‘토양오염 복원 공사가 왜 안 돼냐’ 했더니 아파치 사업이 착수금이 안 돼서 건물을 못 헐어서 못 한대요. 그 사업비 그대로 있고요.

그러면 이게 국방부 전체에 보면 누군가 조정·통제를 해 주는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격헬기 사업하는 사람 불러 보니까 그게 패키지 사업이라 잘라서 못 한대요. 그런데 아파치 사업은 어떻게 했었어요, 작년에? 작년에 LOA 받았는데 그것 협의 안 돼 가지고 전액 다 불용 처리됐습니다. 그 건물을 헐지 못해서 육군 공병실에서 갖고 있는 토양오염 복원 공사를 완료 못 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마지막 앤드 스테이트로 보면 KF-21 사업이 지연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이·전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여기에 기조실장님 계시잖아요. 이게 각 사업마다 안 되는 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업이 있어요, 국방부 내에. 그것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전용 잘하시면서, 일부 아파치 사업 전용해서 그 건물 파서 내줘야 육군 공병이 토양오염 복원 공사를 해야 시설을 투입하든지 안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걸 내가 두 번이나 각 기관을 다 불렀어요. 공군 KF-21 사업, 아파치 사업, 육군 공병실, 각자의 얘기만 해요, 각자의 이야기만. 그러면 각각 다 불용이 되고 나중에 KF-21 사업이 또 지연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 사업 중에 2개의 사업이 제가 관심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해결해 줘야 되느냐? 국방부장관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이·전용 1조 8000억씩 하면서 그것 몇백억 빼 가지고 건물 헐어 가지고 토양오염 복원 공사 완료를 왜 못 하십니까? 저는 정말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많이 하네요, 이·전용을.

부탁입니다, 차관님. 그런 사업들을 정리해 줘야 사업이 끊어지고 단락 단락 해결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기조실장님 잘 알고, 공격헬기 사업 하시는 분 잘 알고 지금 다 잘 아십니다, 뒤에 계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 차관님께 정확히 보고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마지막으로 황명선 위원님.

○황명선 위원 강선영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할 정도 수준의 예산 전용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고도 안 되고. 지금 그 문제점을 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시정과 주의 조치로써 이렇게 하면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지난번 회의 때 논의를 했다고 하셨으니까……

차관님, 여기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 앞으로 분명히 이러지 않겠다라는 책임 있는 이야기, ‘잘못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개인적으로 감정적인 이런 불편함들이 있어서 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앞으로 제도적으로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이 침해되는 예산 전용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이런 정도의 예산은 앞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뭔가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이야기해야 그래도 우리가 논의해서 일정 정도의 입장들을 정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냥은 못 하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자체감사를 해서 처분 결과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지금 이 자리에서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향후에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내부 프로세스로 잘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전용하지 않겠다라는,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저한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은 이제까지 심사한 대로 시정조치 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조치 요구사항과 부대의견에 관련된 문구 조정에 대해서는 관례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의결과 관련해서 차관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군의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국방부 소관 결산을 세심히 살펴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명심하고 적극 반영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 그리고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는 시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방산 수출 관련 국외 출장으로 부득이 오늘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과 관계관들이 출석하였습니다.

차장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저희 방위사업청이 방위력개선사업 적기 추진, 그다음에 방산 기업들의 발전, 그다음에 수출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부단히 했습니다마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그러면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지난번 국방부와 같이 그런 식으로 보고해 주시면 위원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요.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심사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의 경우는 총 심사대상 건수는 19건입니다. 모두 일반회계이고요. 지난번 소위에서와 같이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해서 사업 유형별로 3개 내지 4개 건씩 묶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보시면 19건입니다.

먼저 자료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묶어서 설명드릴 건데요. 연번 1번부터 3번까지 3건은 지휘정찰 R&D 사업입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연번 1번 시정요구명 대규모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강화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명은 425사업(R&D)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425사업에 따른 군 정찰위성과 연계되는 다출처영상융합체계 개발사업의 결과와 기술적 변수를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예산 증액과 사업 지연이 발생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사청은 대규모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사전 영향분석과 위험관리 절차를 강화하고 총사업비 증액과 일정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고요. 미진한 사업관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내용이고,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자료 2쪽 연번 2번 시정요구명은 사업추진 전 과정의 관리 부실에 대한 재정비 필요입니다.

사업명은 일반회계 수증자율기뢰탐색체(R&D)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당초 2023년 종료를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사업추진 전체 과정에서의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양산사업도 연기되고 전력화 일정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요, 이 사업 지연에 따라서 2024년도에는 사업종료 연도임에도 당초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고 잔액 지급을 위해 12억 원을 전용 집행하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사청은 사업의 전 과정에서 드러난 관리 부실을 철저히 조사·분석하고 후속 양산사업에서는 동일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체계 등을 정비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방사청은 핵심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본예산 단계에서 정확히 반영해서 편성 및 집행의 투명을 확보하라는 제도개선 의견도 있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연번 3번입니다. 시정요구명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확인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사업명은 일반회계 창공모델 성능개량(R&D)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암호장비 및 망분리장비 등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종료 시점인 시험평가 단계에서 뒤늦게 이 내용이 반영되는 등 사업관리 부실이 발생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두 번째 보시면 이와 관련해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장비를 구매하였고 마지막 보시면 임의로 타 사업에서 14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전용 집행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창공모델 성능개량 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문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향후 추가 사업 소요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사전 검토 및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집행하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서비용 암호장비 등의 필요성이 시험평가 단계에서 비로소 검토되는 등의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정부 측은 전부 수용입니다.

다만 2번 수중자율기뢰탐색체는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부승찬 위원님께서 주의 그 다음에 임종득 위원님께서 제도개선 의견을 주셨는데 방위사업청은 주의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주의로 해 달라고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저희가 사업관리 부실하게 한 것에 대해서 좀……

○소위원장 강대식 할 말이 없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부승찬 위원님.

○부승찬 위원 이게 사업관리 소홀 맞지요, 방사청의?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맞습니다.

○부승찬 위원 명백하게 맞지요? 비계획적이고 목적에 맞지 않고 예산편성 안 됐다가 전용을 하고.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사업관리를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업관리에서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있는데 그런 변수들을 앞으로 좀 더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수가 있고 그렇다고 쳐도 전용하는 것 보면 사업이 전부 다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갖다 댔어요, 무인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니까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보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참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구나……

차장님이 보셔도 그렇지 않아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온 것 같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24회계연도에는 아예 예산이 반영되지도 않았던 이런 것들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눈에 너무 선하게 보이니까 지적하기도 그래요. 지적 받기도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부승찬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방금 논의가 된 1·2·3번의 문제점들이 다 공통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업관리 소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의사결정이 지연되어져 가지고 집행이 안 돼서 이·전용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시험평가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발생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정책적인 내용의 변화들 때문에 한참 가다가 다시 새로운 것을 반영해야 되는 문제, 그게 대표적으로 3번 문제 같은 경우인데 암호장비 망분리 관련된 부분, 나중에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들어가니까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도개선을 요구했는데 주의도 좋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러한 R&D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뽑아 가지고 차제에 제도를 진짜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 안 하지 않을까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위원님들께서 주의로 시정요구를 하시면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의를 수용하고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강선영 위원님.

○강선영 위원 저는 사실 이것 이렇게 올라오면 글에 있는 것만 지적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굉장히 꼼꼼히 들여다봅니다, 사업 전반을. 425사업 군 정찰위성 사업이지 않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강선영 위원 제가 이것 보면서 약간 한심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느꼈던, 방사청과 전력개발 단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느낀 게 세 가지 중에 뭐냐 하면 425사업에서 다출처 영상융합체계, 소위 말해서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그것에 대한 어떤 정확한 첩보를 가지고 정보를 만들어 내는 것이 425사업 정찰위성의 목적이지요? 즉, 뭐냐? 적의 움직임을 파악했는데 적의 무엇이나를 분석해서 결국은 지휘관이 결심하고 임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게 다출처영상융합, 다양한 정보를 모으는 거예요. 22년에 전력화됐지요? 이게 22년에 전력화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425사업이 왜 지연됐느냐? 다출처영상종합체계가 이걸 분석해야 되는데 군 정찰위성에서 받아 본 영상이 애랑 연동이 안 되는 사업의 문제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보를 다 받아서 애가 융합하는 게 22년에 됐는데 실제 군 원본영상이 애가 연동이 안 돼요. 이것은 무슨 지연 이런 걸 지적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다출처영상종합체계가 10년 전에 개발됐다, 그래서 너무 오래된 모델이기 때문에 연동이 안 된다 그러면 기술의 변화를 이해한다면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22년에 전력화된 다출처영상융합체계랑 지금 25년밖에 안 됐는데, 작년이면 24년인데 군 정찰위성의 원본영상이 융합체계랑 연동이 안 되는 걸 24년에 7월에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사업 개발이 별도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2019년에 군단급 UAV 시험평가하고 개발하는 곳이 논산의 육군항공학교, 황명선 위원님 지역구, 거기 같이 개발하는 데 제가 지휘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가 봤습니다.

군단급 UAV를 개발하는데 군단급 UAV C4I 시스템이 현재 군단에서 운용되고 있는 지휘·통제시설 통신하고 연동이 되느냐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은 그것 잘 모른다, 연동되는지 여부를. 그러면 전시에 다양한 무기체계를 통합해서 지휘·통제·통신을 해야 되는데 각각의 무기체계가 별도의 지휘통신 시스템으로 각각의 ROC로 만들어지면 어떻게 전시에 상호 운용성과 C4I 시스템이 동일성을 갖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히 사업 지연이 아니라 방사청에 있는 모든 사업들이 각개의 사업 관리자가 다른 사업이 어떻게 가서 우리가 전장에서 합동성을 갖고 전투력을 발휘할 것이냐의 부분에 대한 고민이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심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강선영 위원 그래서 각각의 무기체계가 최신의 기술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수준이 낮거나 그러더라도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무기체계와의 연동성과 그 무기체계가 갖고 있는 운용력을 협업해 가지고 전투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의 문제는 단순히 지연된다, 강화해야 된다, 제도개선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무기체계 개발 단계에서의 R&D,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최고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최적의 무기를, 최적의 조건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경쟁하듯이 최고의 기술만 따진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1번에 대해서.

그다음에 3번 사업,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보안이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결국은 무기로 이긴 게 아니라 암호장비로 해서 개네들의 교신을 통해서 결국은 적의 정

보를 탐지해서 이긴 거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이게 지금 방첩사령부의 보안정책이 강화됐는데도 공작사에서 하는 창공모델, 위계임 하는 모델이잖아요. 이게 망분리하고 암호장비 하라고 했는데 중간에 전혀 검토하지 않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운용시험평가라는 것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거잖아요. 서버용 암호장비랑 DB 암호장비가 필요하다고 그때 판단한다는 것도 늦은 거지요. 그렇지요? 이걸 이미 사업추진기본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체계개발 단계에서 고민했을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방사청의 문제는 각각의 무기체계가 벽을 갖고 개발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각각의 무기체계가 전투기합동전장에서 합동성도 강화하고 제병 협동·합동 연합작전이 같은 전장 안에서 운용이 되려면 무기체계 간에 상호 운용성과 지휘·통제·통신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가장 문제예요. 더군다나 암호장비 같은 것 지적받았는데 애초에 ROC 편성 안 되면 중간에 빨리 못 바꿨습니까?

ROC를 바꾸는 게 어려운 것도 문제예요. 10년씩 걸리는 기술개발 단계에서 ROC 바꾸면 업체한테 고발당해요. 그러나 ROC를 바꾼 사람이 왜 바꾸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방사청에서 합참이랑 의논하세요.

기술이 발전되고 있는데, 10년 전의 AI 기술이 지금 먹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개인한테 책임을 묻지 말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ROC 개발했다’, 업체에서 고발당하는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묻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을 큰 틀에서 합동성 강화와 상호 운용성을 고민하시고 기술이 발전하는 것에 부응해서 방위사업청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의 투명성 좋은데요 너무 투명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조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방사청은.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그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 연번 4번부터 연번 8번까지 총 5건은 지휘정찰 사업의 양산·구매 사업입니다. 유사한 성격이라 같이 묶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연번 4번입니다. 시정요구명 패키지시설사업의 공사비 집행 주의 필요입니다.

사업명입니다, 항공관제레이더(PAR)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해군항공사의 패키지시설사업은 2024년도에 공사대금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당초 2024년도 예산, 11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자체 조정액을 더해서 16억을 확보했지만 오히려 공사 계약금액 15억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불필요한 예산의 조정을 통한 공사비 집행으로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사청은 항공관제레이더(PAR) 사업 패키지시설사업에서 당초 계획된 연부액이나 공

사 진행 정도에 부합하지 않는 중도금 집행 등을 지양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자료 5쪽 연번 5번입니다.

시정요구명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저해하는 이·전용 지양 필요입니다.

사업명 항공통제기 2차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사업 추진의 첫 단계인 대상기종 선정 및 구매계약 체결 등의 일정을 전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업의 진척이 부진한 상황에서 미집행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서 결국은 형식적 예산 집행률만 높이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당초 이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0.3% 정도 됩니다.

방사청은 실질적인 사업의 진전은 없으면서 해당 사업의 예산 집행률만 높이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저해하는 이·전용 집행을 지양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대규모 해외 구매사업의 경우 계약 및 시험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을 과다 계상하지 말고 집행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해서 편성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자료 6쪽입니다.

연번 6번입니다.

시정요구명 전력화 추가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사업명은 근거리 정찰드론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구매시험평가 일정 지연 및 후순위 업체의 고발 등에 따른 수사로 업체 선정이 지연되고 납품대금이 이월되는 등 전력화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24년도 예산집행률이 25.4%에 불과하고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사청은 당초 계획보다 3년 지연된 근거리 정찰드론 사업의 추가 지연을 막고 정찰드론의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해 납품관리 등 세밀한 사업관리에 주의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자료 7쪽입니다.

연번 7번입니다.

시정요구명 구매시험평가 지연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사업명은 잠수함지휘통신체계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시험평가 계획 수립 및 수립 관련 사업이 지연됐다는 내용인데요.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법상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가 원칙임을 고려해 당초 구매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제안서 평가 후에 구매시험평가 사업을 변경하는 것 등의 문제로 형평성 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동 사업이 추가 지연되지 않고 적시에 전력화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 계획을 세밀히 마련하고, 합참본부는 구매시험평가 계획 수립 지연의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은 자료 8쪽입니다.

연번 8번입니다.

시정요구명 구매시험평가 및 성능 확인 등 공정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사업명 다목적무인차량입니다.

이것도 사업이 지연된 내용인데요. 지적사항 보시면 방사청은 구매시험평가의 기종결정 과정에서 ‘최대성능 수치’ 관련 경쟁업체 간 이견 발생으로 사업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경쟁업체가 서로 다른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성능 수치를 제출함으로써 최대 수치 논란이 심화된 측면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사청은 다목적무인차량 사업 추진 시 구매시험평가 및 성능 확인 등 절차를 공정하게 추진하여 집행을 저조와 대규모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전력화 지연을 방지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를 보시면 긴급소요결정으로 추진되는 만큼 조속히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세 번째 보시면요 방사청은 성능 수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취지에서 동일한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인증자료를 제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시정 요구하신 사항 전부 수용입니다. 다만 5번, 6번은 주의와 제도개선으로 각각 의견을 주셨는데 5번, 6번 다 주의로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제가 4번부터……

○소위원장 강대식 강선영 위원님.

○강선영 위원 4번 사업 항공관제레이더 사업이지 않습니까? 공군 10기, 육군 4기, 해군 1기.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강선영 위원 이게 보니까 PAR 사업이에요. 외국에서 구매하다가 LIG넥스원에서 운용을 하기 위해서 개발한 거라서…… 국산화하는 PAR 내용이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양산 지금 하는……

○강선영 위원 양산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보니까 사실 양산하는 것이 장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공사계약금을 중도금 지급을 위해서 계약금액에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해서 이걸 했는데 실제로 집행은 11억 3900만 원밖에 집행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강선영 위원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급하게 중도금을 당겨서 줄 정도의 사업이 아니에요. 제가 군에 있으면서 많은 경험을 한 게 뭐냐 하면 포크레인이 들어와 가지고 땅을 한 삽만 파 놓는다, 연병장, 활주로. 한 삽 딱 파고요 그 포크레인은 겨울 내내 거기서 떠나지 않아서 부대 활동만 지원되고 중도금만 30% 받아 갑니다. 겨울 공사를 통상합니다. 제발 집행하기 위한 집행을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ASR 레이더 전용해서 PAR 했는데, 제가 그래도 출신이 항공 아닙니까? ASR 레이더하고 PAR 레이더 잘 알거든요. 죄송합니다, 아는 척해서. ASR 레이더는 공항감시레이더예요. 전반적으로 공항 전체를 하는 거고 PAR 레이더는 공항에 접근하는 정밀접근레이더, 소위 GCA 레이더라고 합니다, 정밀접근. 이 GCA 레이더는 ASR 이런 것을 하는 그다음 단계에 아주 정밀화하는 건데 이게 전반적으로 돼야 PAR 레이더가 설치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보니까 패드 설치하는 장소, UPS, 통제실, 정비실 이런 거 하는 사업으로 ASR 것을 전용했더라고요.

제가 조목조목 따지자면 제도개선 아니고 주의 아니고 정말 전부 시정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제가 진짜 마음이 약해서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행이 되면 계속 더 강한 시정요구사항을 할 테니까 좀 이런 것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마시고요. 중도금 그렇게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중도금 주기 위해서 이·전용 좀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5번 항공통제기 2차 사업 마찬가지로입니다. 이거 항공통제기 업체가 입찰 포기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유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유찰되는 사업에 24년에 1089억 중 28%에 달하는 307억 원을 다른 사업에 전용하셨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강선영 위원 계속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이것도.

그다음에 근거리 정찰드론 이것도 사업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이것은…… 근거리 정찰 자산은 전방 대대급 기동·신속대응·상륙사단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전력화가 시급한 것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관심 좀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7번 잠수함은 저만 지적했는데 이거 애초에 사업이 방위사업법상에 보면 시험평가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잖아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런데 이거 왜 갑자기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로 바꿨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그게 이제 실물평가 하기로 했다가 미군 잠수함,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드는 업체가 실물을 갖고 있다가 미군 잠수함 부대로 납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납품하기 전에 저희가 시험평가계획이 수립돼서 업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실물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시험평가계획이 그때까지 수립이 안 되고 미군 부대로 납품이 되고 나니까 처음에는 미군 부대 것을 실물평가 하겠다고 했는데 미군 부대에서 보안상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실물평가를 못 하고 이미 미군 부대에 납품이 돼서 검정이 완료된 것이니까 자료에 의한 평가를 하자라고 이렇게 다시 정해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강선영 위원 나중에 이거 관련자들이 특정한 어떤 이권이라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실무자들이 처벌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애초부터 이런 것들은 합참이랑 잘 협의하셔 가지고……

제가 제도개선이라고 넣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지 단서조항을 집어넣든지 그렇게 안 하면 실무자들, 사업하는 사람들 다 피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도개선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라고 했으나 안 될 경우에 이렇게 한다라고 명시를 하든지 해서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8번 제가 제도개선 냈는데요. 8번 사업은 제가 디테일하게 파고들어 있는데, 8번 관련자 전역지원서 냈지요? 전역지원서 냈습니다, 이거 하던 사람. 이거 애초에 2개 업체 간에 문제가 생긴 건데 1개 업체가…… 지난번 KDDX 사업처럼 그렇게 문제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거.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강선영 위원 K-방산, K-방산 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나라 업체에 뭐라고 말은 못 하는데 이런 식의 잘못된 실마리를 줄 수 있도록 계획서를 그렇게 작성한 과장들도 문제고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사업이 지연됩니까? 문제가 되니까 사업제안서 다시 내겠다고 했다가 안 된 거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기존 낸 제안서는 제안서대로 하고 나중에 최고 성능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양 개 기업 간에 협의를 됐고요.

○강선영 위원 제가 지금 이걸 구체적으로 안 하는 것은…… 이 사업 한 사람들이 의도가 있지는 않았으나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지연된 거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런 것들을 할 때 왜 계약서…… 방사청에 변호사들 엄청 많잖아요.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강선영 위원 이런 것을 다 꼼꼼히 계약서 명시된 것을 확인해 보라고 변호사들 엄청나게 많이 고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강선영 위원 그런데 왜 이거 똑바로 못해 가지고 업체에서 컴플레인 해 가지고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해 가지고 최대 수치냐 아니냐 따지고 이런 논의를 방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초보자처럼. 그렇지 않나요, 차장님?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그것도 세밀한 관리가 좀 부족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제안요청서나 이런 것을 작성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적인 검토 명확히 받으셔서 가지고 사소한 문구 하나로 사업이 잘못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강선영 위원님, 앞으로 마음 약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부승찬 위원님.

○부승찬 위원 8번 항목 이게 업체 간 합의가 된 거예요? 방사청의 지침에 따르기로 한 거예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세부내용 합의는 아직 아니고 방사청 지침에 따라가기로 양개 기업 간에 협의가 됐고요. 다만 법무검토가 9월 초쯤에 나올 건데 그것 받아서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부승찬 위원 이제 그러면 머리가 안 아픈 거예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조금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나아질 거라 생각하십니까? 이게 계속해서 업체 간의 논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상당히 방사청도 괴롭겠어요. 저는 방사청 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은 진짜……

물론 사업관리 측면에서 방사청이 흔들린 것은 있었지요. 그렇지요? 최고성능평가도 그렇고 흔들린 부분은 있었지만 업체가, 예컨대 다른 업체에서는 이 업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 규모도 크고 이걸 따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단호한 면이 보였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한 가지만 여쭙보고 싶어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말씀하십시오.

○부승찬 위원 이게 지금 사업과 관련해서 차장님은 상당히 회의적인 것 같아요, 전체 사업을 보면. 주의나 제도개선이나 하면 그냥 큰 것들을 다 요구하고 하면 청장님도 상당히 방사청의 사업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국회에서 좀 강하게 이거는 지적을 해 주고 시정 요구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아까 잠깐 국방부 결산심사 할 때 사업에 대한 변동 가능성 그다음에 문제점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셨는데 사업에 있어서 변동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무것도 개발해 보지 않은…… 최초 개발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시험평가에서 오류도 생기고 또 부품이나 장비들이 해외에서 들어오다 보면 외국의 수출 통제 내지는 부품에 대한 수급 문제,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 수급이 지연되는 등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거기에서 남은 돈을 국내 방산기업들은 충분히 돈을 더 받아서 협력업체에 돈을 다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기업들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 못 되는 부분을 집행 가능한 쪽으로 해서 국내 방산협력업체들이 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하고 싶은데, 다만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부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관리를 보다 더 철저하고 세밀하게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사업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아까 강선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KDDX도 그렇고 지금 다목적무인차량도 그렇고 외부의 시각에서 보면 업체 간 갈등으로 비쳐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방산 생태계를 보면 그렇잖아요. 원청이 있을 거고 그다음 하청 뭘, 여기 생명줄을, 동아줄을 쥐고 있는 하청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업체가 만일 이 사업에서 탈락했을 경우 밑의 협력업체들은 그냥 죽음으로 내몰리는 그런, 없어지고 그랬다가 다시 부활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대기업들만 보고 있지만.

그런데 이제는 업체들과 그다음에 협력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방안들이 만들어져서 이런 제도개선을 해 보세요. 그래서 제도개선을 해서 국회에다 좀 건의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들은 풀어 주고.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 양단의 결투를 하는 이런 방산은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지금 언론에 무슨 원팀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데 한 팀이 떨어지면 그 인프라, 그 인재들은 다 흩어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술인력은 보존되지 못하고 전문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20년 된 법적 근거 이것을 가지고 한다면 K-방산 4대 강국 이게 진입이 되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핵심기술들 이런 것들은 이 입찰에서 떨어지면 도태되고 그러면 방위사업청에서 제대로 된 상생협력 방안 그리고 협력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믿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안을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지금 이게 법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걸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이런 거잖아요. 좋은 안을 갖고 있으면서도 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것 법에도 없고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좋은 안인데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방사청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대두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 방산 생태계를 조금 더 건전하고 모두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상생협력 방안을, KDDX도 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방안들을 좀 마련해서 갖고 오세요.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고 이렇게 가면 우리는 죽을 것 같고.

그러면 만들어서 갖고 오면 우리 국방위 차원에서 이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국회 차원에서 보증을 해 주고 미비한 법은 개정을 해 주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여야 간에 의견 대립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이 정확하시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개선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보고를 드리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입법사항이 좀 있어서 그것 한번 보고드리고 추진에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간단명료하게 지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저도 다목적무인차량과 관련해서 질문과 내 생각을 얘기하고 싶은데, 지연이 지금 얼마 정도 됐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1년 좀 넘게 지연이 됐습니다.

○임종득 위원 이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들을 죽 보면, 지금 강선영 위원이나 부승찬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청이 있어요. 방사청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이 거의 유사한 사례를 보이면서 사업 지연으로 가고 소요분에 대한 불편과 어려움을 지금 끼치고 있는데.

청과 관련된 부분은 처음 사업을 할 때 전반적인, 처음과 끝과 관련된 부분을 규정과 방침에 따라 법리해석을 통해 가지고 절차들을 만들고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정해서 경쟁업체들이 아무리 경쟁이 과다된다 하더라도 umpire(umpire)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록만 준비가 되어진다면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자체가 지금 청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게을러서 못 하는 건지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이 시작되고 기업체 입장에서는 살기 죽기로 해 가지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요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걸 또 들어 줘요. 들어 주면 상대 기업에서는 ‘이것 뭐냐. 언페어(unfair)한 것 아니냐’라고 또 문제를 제기해요. 그 소리 들어 보면 또 그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못 하고 저것도 못 하고 ‘이것 왜 이렇게 했냐’ 그레 가지고 담당 실무자가 군 생활을 그만두는 문제까지 생기고 하는 부분이 다 이것과 연계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방사청 차원에서 대부분의 모든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어느 지점인지를 보면서 제도개선 차원 아니면 법을 바꿔야 될 부분이 있으면 법을 바꾸더라도 하는 자체 노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경쟁이 치열하게 되다 보니까 대기업 간에 그냥 죽기 살기로 그 사업과 관련해서 뛰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비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 로비에 흔들리는 쪽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을 통해 가지고 이상하게 결정되어지거나 진행된 부분들이 또 나중에 드러나요. 그러면 이걸 처리를, 처벌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가운데 이도 저도 못 하는 상황들이 생긴다. 그런 측면에서 담당하는 실무자들이나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이 정말 공정하게 방산수출 4대 강국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기준을 잡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또 자체 내부의 감사활동들도 꼭 필요하다, 그 두 가지 내용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사안도 방금 내가 말씀드린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된 것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황희 위원 위원장님, 대부분 주의인데 빨리빨리 진행을 시키는 게, 대부분이 주의예요.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이 위낙 하실 말씀들이 많아서 지금 많이 지연되고……

더 이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전문위원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자료 9쪽, 연번 9번부터 연번 12번까지 기동화력 사업 및 항공기 사업, 4건을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 연번 9번입니다.

시정요구명 사업 지연 보완방안 마련입니다.

사업명 40mm 고속유탄기관총-Ⅱ(R&D)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기본적으로 집행이 부진하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사청은 사업 지연에 따른 전력공백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세밀한 준비를 통해 추가 지연 없이 시급히 전력화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연번 10번입니다.

시정요구명은 패키지시설에서 국회의 심의 없는 감리비 예산의 증액집행 시정 필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자주도하장비입니다.

주 장비 이외에 패키지시설인 정비고 등의 시설공사 함에 있어서 감리비 증액 논의를 이유로 전력화가 시급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고 사업 지연이 초래된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감리비와 관련해서 A육군공병학교에서는 공사비 대비 1%, 공병여단의 경우 공사비 대비 8.6%라는 감리비를 설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사청은 전력화가 시급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중단과 지연을 초래한 동 사업에 있어서 전후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여 바로잡으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특히 감리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과 예산을 준수해서 이러한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연번 11번입니다.

시정요구명 신뢰도시험 일정을 고려한 적정 예산편성 및 집행 필요입니다.

사업명 단안형 야간투시경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기본적으로 신뢰도시험 등 추진 과정에서 이월, 재이월 등을 통해 집행을 이 낮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사청은 이 사업이 3년간 지연되었으므로 정상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자료 12쪽입니다. 항공기 사업입니다.

연번 12번입니다.

시정요구명 조종사 교육생 교육지연 보완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사업명은 소형무장헬기(R&D)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이것도 패키지시설사업의 불시 지연의 문제이고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사청은 훈련센터 건설 지연으로 전력 공백이 예상되므로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모두 시정요구사항은 다 주의로 주셨는데 방사청은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제가 지적을 거의 다 한 것 같아서요.

9번 사항, 40mm 고속유탄기관총 이게 K4-II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 K4-II 사업 보니까 업체에서 미응찰한 이유가 정확성이 최대 발사 속도 ROC에 충족이 안 돼서 이렇게 한 겁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K4-II가 이렇게 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역들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 ROC에 대한 변경을 하는 걸 되게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감사를 받는 일이 대부분이고 감사받아서 이걸 낮춰 주면 ‘업체와 유착이 됐느냐?’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두려워해서……

차장님, 차제에 개발사업인 경우에 ROC를, 진화적 ROC를 하면서 중간마다 ROC 수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만들어서요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사업이 가야 되는 목표와, 전력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ROC를 수정하는 것에 대한 제의를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통과되면 사업하는 개개인한테 책임이 안 돌아가도록, 단 충분히 기술 검토와 사업에 대한 긴급성이라든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주면 담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담이 없겠습니까. 제가 이것은 꼭 제도개선을, 주의도 넣었지만 제도개선도 같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다음에 10번 감리비 임의로 올리는 것, 이건 아까 부승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에서 예산심의권 확정 권한을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방사청은 임의로 예산을 마음대로, 처음에 설정한 것을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전용했다, 왜 그러시는지? 화를 엄청 내고 싶은데 하지 마세요, 차장님.

그다음에 11번 단안형 야간투시경 이것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보니까 핵심 부품인 영상증폭관이 ROC 미충족이지요, 이것도?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것 1순위 업체가 탈락했어요. 2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계속 신뢰도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단안형 야간투시경의 핵심 부품이 뭐냐? ROC를 수정하라고 말한 것에서 또 다른 의견인데, 임의로 무작정 업체들이 없으니까 안 하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에 따라서…… 단안경은 야간에 투시해야 되는 건데, 열상 증폭해서 보여지는 것이 핵심 부품인데 1순위 탈락시키고 2순위부터라고 하면 과연 단안경은 이 기능이 떨어져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한번 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아니, 그것은 신뢰도시험이라고 수명하고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충족이 안 돼서……

○강선영 위원 당연하지요, 신뢰도. 전력화시켰는데, 10년 수명을 갖고 왔는데 5년 만에 녹색광이 백색광으로 바뀌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것, 사실 단안경 가격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나 지상군이 활용할 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12번 소형무장헬기, 조종사 건축 이건 뭐가 문제냐면 ROC의 문제인데요. 이게 원래 2021년도에 1차분 들어와 가지고 총 21대가 들어오던 소형무장헬기 사업이, 이게 LAH 사업입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ROC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LAH ROC와 그것에 대한 사업, 전체적인 패키지 사업이 잘 갈 수 있도록 사업관리해 주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업체들이 땅 파고 포크레인 집어넣고 공사 지연하는 것 없도록 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 정리가 돼서 정상적으로 지금……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다른 위원님들……

오늘 완전 강선영 위원님만 하시는 것 같아요. 화도 내셔도 됩니다. 화 가라앉히지 마세요. 화내세요. 괜찮아요.

황명선 위원님.

○황명선 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소위원장 강대식 괜찮습니다. 하세요.

○황명선 위원 한국형 KDDX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그다음이에요.

○황명선 위원 그다음인가요?

○소위원장 강대식 예. 먼저 해 버리세요, 시작했는데.

○황명선 위원 아닙니다.

그러면 12번 소형무장헬기와 관련돼서, 제가 KDDX도 그렇고 지금까지 나온 내용 보면 결국은 방사청의 사업과 관련돼서 고소·고발로 인한 사업 지연 그리고 예산에 대한 전용·불용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것에 따라서 주의나 시정이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쭉 있는데 모든 건들이 다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근본적으로 방사청과 관련된 전력체계, 무기 개발, R&D 개발 그다음에 무기 생산, 이것과 관련된 우리 군 전력체계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고발로 인한 군 전력체계, 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전력체계에 대한 문제점들이 클 것이라라고 정말 예측이 됩니다. KDDX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방사청차장님, 정말 모든 안들이 다 비슷한 안들이에요.

여기에 대한 제도개선을 반드시 해야 돼요. 결국은 우리 군 전력체계에 대한 현대화 그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해외에 수출하는 K-방산. 그런데 업체끼리의 경쟁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예산이 불용되거나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런 형태가 계속 이루어져요. 근본적인 제도개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의 군 전력체계의 현대화가 핵심이지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주문을 꼭 드리고 싶고요. 소형무장헬기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무튼 당부드리고 개선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전문위원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3쪽입니다.

연번 13번부터 연번 15번까지 3건은 함정 및 유도무기 사업입니다. 3건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3쪽, 연번 13번입니다.

시정요구명 사업 지연에 따른 전력공백 방지 등 대책 마련 필요입니다.

사업명은 한국형구축함(KDDX)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경쟁업체 고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다는 내용 한 쪽지
랄요 지연돼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많이 전용했다, 그게 지적사항입니
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사청은 한국형구축함 사업이 당초 계획 대비 2년 이상 지연되
어 전력공백이 우려되므로 추가 지연 방지를 위한 구체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의
불용·전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자료 14쪽입니다. 연번 14번입니다.

시정요구명 예산을 사전에 반영해 국회 심의 받을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업명 검독수리-B Batch-II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현재 운용 중인 고속정 노후화에
따라 유도로켓과 탄약이 탑재된 고속정을 국내 건조하는 사업인데요.

지적사항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에 계획에 없던 탄약 구매를 위해 관련 예산을 전용
하여 집행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사청은 향후 탄약 소요량을 미리 전수조사 하여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고 국회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자료 15쪽, 연번 15번입니다.

시정요구명 사업의 핵심변수에 대한 사전 검증 강화 및 예산 반영 필요하다는 내용입
니다.

사업명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 Block-III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이것도 총사업비 중에서 탑재 플랫폼이라는 핵심 사항의 결정 지연으
로 연구개발 및 계약 일정이 지연됐고 집행률이 낮고 전체적인 전력화 일정이 지연됐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사청은 플랫폼 선정 등 핵심 변수에 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하
고 사업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과다 계상을 지양하는 등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확보
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정부 측은 시정조치사항에 대해서 전부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KDDX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8월 12일 날 자문회의를 했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기술진부화에 대한 자문위였고요. 기술진부화는 없다라는, 최신 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에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지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 설명 결과를 이제 장관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고 최종 방추위를 거쳐서 의사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거쳐서요.

○임종득 위원 지금 이게 문제가 두 가지인데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소요군의 전력에 여러 가지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가장 큰 거고.

두 번째는 예산에 반영된 것들이 사업 추진을 못 하다 보니까 지금 대규모 전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까 그것 가지고 처벌을 해야 된다, 이·전용 가지고 논의를 많이 했는데 이번 사업 같은 경우도 결국은 493억 5100만 원이 전용이 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검독수리 사업, 장보고·울산급 함정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국회의 예산 심사나 편성권을 완전히 위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두 기업이 있어요. 한화와 현대중공업. 거기서 죽기 살기로 지금 이려고 있는데 국내에서 굴지의 대기업이 이렇게 싸우는 과정에서 해외에서 우리가 수주해야 될 엄청난 많은 기회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게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원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걸 양대 기업 차원에서 좀 타협을 하면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수없이 이야기하는데 안 가요. 지금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쉽지 않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이 지금 새로 바뀌셔서 가셨는데 제가 이 부분들은 눈여겨 추적하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방사청에서 중심을 잡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결정을 하든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결정을 안 하면서 계속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과정에서 예산의 전용이 이루어지는 거고. 고스란히 소요군과 우리 국가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다 하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아마 국방부에서도 장관님 보고를 했을 텐데 이 부분들은 방사청에서 중심을 잡아 줘야 된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황명선 위원 기술진부화가 없다고 평가가, 결론이 났어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이게 기본설계가 좀 오래됐으니 최신 기술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설계에 반영이 안 됐을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설계 마지막 단계에서 무인기를 탑재할 수 있는 기술이나 그런 것들은 설계에 기본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군이나 방사청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외부에 있는 조선 전문가, 함정 전문가들, 대학교수들하고 연구원들하고 모여서 설계 검토를 했는데 최신 기술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황명선 위원 이게 납품이 언제예요? 2030년이잖아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선도함은 31년까지, 설계와 선도함이 31년에 완료됩니다.

○**황명선 위원** 그때까지 예측해서 기술진부화가 다 평가가 된 거예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그렇습니다.

○**황명선 위원** 평가보고서와 평가위원회에 참여했던 명단하고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고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과 내용들이, 우리 국방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주셨지만 또 방사청에서도 여러 의견들을 갖고 있겠지만 방법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기술진부화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 한번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알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근본적으로 하나만 더 지적할게요. 계속 똑같은 이야기예요. 계속 끝까지 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방사청의, 서로 업체끼리의 경쟁으로 인해서 고발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돼요. 불용돼요. 그리고 사업을 전용해요. 그런데 지금 방사청하고 국방부도 그렇고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예산 전용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해요. 안 하고 결산 과정에서 꼭 나와요. 이것 굉장히 큰, 아주 중대한 국가재정법 위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에 대한, 간부들에 대한 인사평가의 매뉴얼을 저는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 전용을 하는 것을 겁내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예산에 대한 집행률은 또 굉장히 평가하는 항목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예산 집행률보다 예산 전용의 부적성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내용들을 세목 세목 구체화시키면 이런 문제가 저는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 거와 관련돼서, 방사청에 특별히 이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제도개선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부승찬 위원님.

○**부승찬 위원** 이 KDDX 사업과 관련돼서 국방위 위원들한테 설명은 다 하셨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혹시 시간 안 되시는 분들은 양해를 구하고 보좌관……

○**부승찬 위원** 그러면 의견이 모아지던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부승찬 위원** 경쟁입찰이에요, 수의계약이에요, 의견이?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아니, 그게 아니고 방사청이 국익을 고려해서 잘 결정해라 뭐 이런 의견……

○**부승찬 위원** 그걸로 의견이 모아지는 거예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뭐 특별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주시지는 않았습시다.

○**부승찬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 보고서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통보예요, 통보. ‘어떻게 갔으면 좋겠습니까’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게 아니라 수의계약 보고서를 갖고 오고 ‘전혀 문제없습니다’, 이것 잘못된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희의 선택권은 예스 오어 노(Yes or No) 딱 2개밖에 없는 거 아니에

요. 그건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 지연될 것 같으니까 국회에다 떠넘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이 KDDX 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방사청이 메시지를 잘못 냈어요, 애초에. 24년 9월에 KDDX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공동개발, 동시 발주, 동시 건조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냈어요.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리고 ‘관계 부처하고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산업부에서 방산업체 지정을 한화오션을 해 주고 2개 업체가 되어 버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 자체가 계속 그런 쪽이야, ‘아, 이것은 공동개발이구나’. 이렇게 되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수의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 나는 점은 지금 업체 간에 뭐 협의된 것 있어요, 방사청하고?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아니요, 뭐 특별히 된 것은 없습니다.

○부승찬 위원 특별히 없으니까 지금 입장은 어때요? 수의계약으로 가는 거예요, 보고서대로?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위원님, 그것은 사실 최종 의사결정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부승찬 위원 아니, 방사청의 의견을, 보고서를 갖고 왔으니까 의견이 수의계약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

○부승찬 위원 답변이 곤란하십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아니, 이게 지금 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부승찬 위원 사실은 애초에 잘못됐어요. 메시지 관리가 안 된 사업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지금 업체 간에 협의되는 것을 보니까 방안이 만들어질 것도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이 지연 안 되고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공동개발을 하면서 뭔가 좀 상생할 수 있는 게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법적으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2번 함에 대한 사업 추진을 빨리 하는 방안.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그런 방안 포함해서……

○부승찬 위원 그러면 국회에다 요구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없어요, 방사청에서? 1번은 상세설계를 통해서 선도함이 만들어지고 나서 2번 함에 대한 입찰공고를 내면, 그렇잖아요 한 업체에서는 불만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어떻게 담보하나, 경쟁입찰인데’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업체 간에 협의되는 게 좀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그것 관련해서도 아까 앞전에 말씀하신 방산 생태계 상생 협력, 대기업 간에 또는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에, 중소기업 간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제도개선안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이 건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면 국회에서 풀어 줘야 될 게 있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그것은 법률적으로 입법사항이 좀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빨리 가지지요. 왜냐하면 전력화 지연되면 이게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거니까. 물론 전부 도전적 과제잖아요,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길을 두 업체가 가겠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지금 협의되는 부분들 그리고 전력화 시기를 1년, 2년이 아니라 맞출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을 해서 새로운 사업 방식으로 해서 법을 우리가 조금 보완해 주고 그래서 한번……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전적으로 한번 해 보시지요. 그것 아니면 뭐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계속 논란만 있을 거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예, 그것을 우리 국방위 위원님들께 좀 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전문위원님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6쪽입니다.

자료 16쪽 연번 16번부터 연번 19번까지 4건은 방위산업 정책지원 및 행정지원 사업입니다. 4건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6쪽 연번 16번입니다.

시정요구명은 예산의 과다 이·전용 주의 필요입니다.

사업명 보시면 예산 이·전용에 관한 총괄 부분입니다.

지적사항은 전용액, 이월액이 많다는 내용이고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예산집행원칙을 무력화하는 과다한 예산 이·전용 관행을 정비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저해하는 예산 전용을 지양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자료 17쪽 연번 17번입니다.

시정요구명 국외출장 수요를 현실적으로 반영한 국외업무여비 편성 필요 내용입니다.

사업명 국제방산협력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024년도 국외업무여비는 당초 예산 4억 원이었으나 실제로 다른 사업에서 전용을 해서 당초 예산액의 215%인 9억 원을 집행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사청은 국외업무여비 예산안 편성 시 출장 수요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다른 사업으로부터의 예산 전용에 의존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자료 18쪽입니다.

연번 18번, 시정요구명은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실효성 확보 노력 필요입니다.

사업명을 보시면요 방산분야 인프라 및 상생협력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전문인력 양성사업 중에서 그 세부사업 중에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특성화고 학생 교육 과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22년 과정 개정 이후에 매년 중도

퇴사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사청은 중도 퇴사자 발생을 방지하여 방산기업의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K-방산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자료 19쪽입니다.

연번 19번, 시정요구명은 소송 패소에 따른 국고 손실금 축소를 위한 개선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기타행정지원 사업이고요.

지적사항은 보시면 연도별로 소송제기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패소에 따라서 소송비와 패소금액으로 집행되는 국고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방사청은 패소한 사건의 원인분석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국고 손실을 방지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전부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강선영 위원님.

○강선영 위원 제가 지적한 게 방사청 패소인데, 제가 PPT도 준비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준비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방사청 최근 5년, 그러니까 20년부터 25년 8월까지 소관 사업 추진하면서 총 298건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보시면 이게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298건 중에 방사청이 피소, 그러니까 상대방이 방사청을 고소한 게 203건입니다. 203건 중에 패소 사건이 29%고요. 소송비와 패소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032억 원입니다. 3032억 원이 패소됐는데 그 중에서 163건, 승·패소 중에 방사청 패소 33건, 일부 패소가 14건입니다. 그래서 29%가 되는 겁니다, 163건 중에.

그중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이렇게 3032억 원이나 되는데 여기에서 방사청이 로펌을 얼마큼 고용했나 보니까 로펌을 고용한 건수가 111건이고요. 수임료로 36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111개의 로펌에서 승소율이 37%입니다. 36억 원 지출해 가지고 3032억 원을 썼는데 승소율 37%면 로펌을 똑바로 고용 안 했거나 방사청이 이길 의지가 없거나 내 돈 나가는 것 아니니까 관심이 없는 것 아닐까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강선영 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저희가 내부에 소송 전담하는 법무관이나 변호사들이 있는데 사건이 좀 어렵거나 복잡했을 때 로펌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좀 어려운 사건을 외부에서 하다 보니까 승소율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서 그냥 단순 비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강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렵지만 승소율이 37%면 아예 로펌 고용 안 해야지요. 거기 변호사들 계신데 어려운 것 로펌 주면 방사청이 그 변호사분들 왜 고용해 갖고 그렇게 많은 변호사를 고용하셨습니까,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강선영 위원 이것 다 국고잖아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제가 이 3000억 그러면 막 계산이 됩니다. ‘이게 헬기는 몇 대지, 우리 인원들 인건비로 따지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얼마큼 올려 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사청이 왜 패소했는지 원인 분석을 해 가지고 3000억씩이나 매년 이렇게, 5년간이니까 5년간 3000억씩 이렇게 패소하면 이게 얼마나 전력 공백이 생기거나 얼마나 우리 군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곳에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거나 로펌이 승소율이 낮으면 어떻게 이걸 건가……

군인은 아예 2등이 없어요, 2등이. 지면 죽는 거예요, 2등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결심으로 방사청도 싸우세요. 아니면 애초에 소송을 처음부터 그냥 손들고 잘못했다 하시든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강선영 위원 차장님, 저는 이 돈만 보면 이 돈이 머릿속으로 돌아다닌다니까요, 애들 급식이 개선되는 모습이랑 수당 올라가는 것. 3000억은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시정을 꼭 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강선영 위원 데이터를 계속 누적시키고 있어요, 우리 사무실에서. 우리 사무실 직원들 엄청 힘들어요, 저 때문에.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이것도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강선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황희 위원님.

○황희 위원 저도 질의 안 하려다가……

차장님, 방금 강선영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것 보면 승소율이 30%대고 패소금액이 3000억에 가깝고 소송이 5년간 300건 정도 되고 이것은, 그렇게 승소율이 낮고 패소비용이 3000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방사청이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잘못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지고 승소 못 하고, 그런 거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황희 위원 그런데 항상 고소·고발이 있고 이러면 그 원칙을 결국은 방사청이 잘 안 지켜서 생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의제기하고 고소·고발하고 그러지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 다른 곳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방사청이 자기가 원칙을 잘 못 지키고 뭔가 비리가 있어도 그 내부에 있는 거라는 방증이거든요. 그러지 않고서는 다 이겨야지요. 그걸로 인해서 비용만 지출된 게 아니라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가적 손실도 클 거고 그런 경제적 비용까지 합치면 3000억을 훨씬 초과할 겁니다.

이것은 해마다 결산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법률

안 발의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국정감사에서도 이게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질 거고 방사청 내부에서도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체 분석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위원님 지적 옳으시고.

한 가지만, 조금 오해를 살 수가 있어서요, 저희가 패소하는 금액인데 그 패소하는 금액이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 주로 지체배상금, 원가 산정에 대한 소송입니다. 대표적으로 해상초계기, 대한항공이 700억 지체배상금 저희가 물어내게 됐는데 공무원들은 계약이 지연돼서 납기가 지연되면 그 일수에 따라서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데 기업들은 여러 사정에 의해서 지체가 됐기 때문에 그 사정을 고려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을 금전적으로 계산하기가 어려우면 공무원들은 일단 지체 일수에 대한 배상금을 부과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원은 정부가 지체배상금……

○황희 위원 차장님, 그 반대되는 사례를 제가 지금 여기서 줄줄줄줄 얘기할 수 있어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알겠습니다.

○황희 위원 얘기 안 하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방금 그 내용과 관련해서, 지체 상환금 이야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법을 좀 개정을 하고 해 가지고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지금 제도개선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체 상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체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사업하는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 것 있잖아요.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많은, 피소를 받아 가지고 한 3000억 원 정도의 배상을 문다고 했을 때 소송에서 잘 대응하지 못해서 진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 차원에서 사업을 관리하는 전반에 있어서 부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변호사가 나서 가지고 해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처음과 끝 전 과정을 청에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맞습니다.

○임종득 위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국외출장 소요와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게 지금 한 215%, 그러니까 4억 정도 했는데 9억 9500을 썼단 말이에요.

이게 2024년도의 일만은 아니지요? 지금 매년 이렇게 쓰고 있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아닙니다. 2024년 그때부터 출장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임종득 위원 제가 묻는 이유가 K-방산 붐이 일어나면서 출장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추세를 가지고 실제로 전년도에 예산 반영을 하면서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 올해도 또 이렇게 하면 내년도도 똑같은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출장 수요가 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기재부라든가 국방부하고 잘 이야기를 해서 이 부

분은 현실화 시키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강대식 오늘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 중에 전부 다 예산편성해서 불용하고 전용하고 사고이월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이 참 많았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작년에 500억 감액됐는데 하나도 못 쓰고 전용하고, 이것은 예전을 아주 잘못 했다거나 안 그러면 우리 국회를 아주 무시한다거나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런 일이 매년마다 일어나고 있는데 향후에 이게 정말로 시정이 안 되고 제도개선 조치가 안 된다면 특단의 조치를 한번 내릴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이야기 많이 나눴었는데 방사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고민을 해 보시고 향후에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이것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는 2022년도부터 이것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차장은 중간에 중도 사퇴자들이 왜 나온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사퇴한 사람들의 내역을 다 보면 일단은 군 입대하고 대학 진학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그 두 가지가 주된 요소인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서 업무 적응 문제라든지 아니면 처우라든지 직무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원인 분석이라든지 이런 게 한번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그래서 지금 사퇴를 좀 줄이기 위해서 지역에 협의회 구성하고 또는 그 지역의 대학을 중심으로 고등학교하고 해서 맞춤형 교육과 사후관리, 어떻게 앞으로 이 사람들이 회사에 잘 적응해서 장기근무하게 할까 그런 컨설팅하고 이런 전담 조직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중도사퇴자 중에 재교육이라든지 재취업이라든지 이런 사례는 있어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너무 짧은 기간이라서 아직까지는 없고?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소위원장 강대식 그러면 앞으로 재교육이라든지 재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어떻게 할 용의는 계세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방사청 소관 결산에 대한 항목별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의 심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방위사업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은 이제까지 심사한 대로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관련된 문구 조정에 대해서는 관례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회계연도 결산 의결과 관련해서 차장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방위사업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유념해서 사업 관리와 예산 집행을 보다 더 철저히 하겠고 말씀드린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강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서 홍소영 병무청장과 관계관들이 출석하고 계십니다.

청장님 간략히 인사해 주십시오.

○**병무청장 홍소영**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병무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고 오늘 저희 병무청 소관 결산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며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시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다 해 버리지요.

○**전문위원 서덕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병무청 소관 결산소위 심사자료 1항부터 10항까지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시정요구명은 병역판정검사 사업 예산 불용 최소화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병역판정검사입니다.

지적사항은 병역판정검사 수요가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인원 및 소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계획을 정밀히 수립하여 불용률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

개선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입니다.

시정요구명은 잠복결핵 위탁검사 예산 불용 최소화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역시 병역판정검사입니다.

지적사항은 잠복결핵 위탁검사 예산은 당초 예산 편성되었던 단가보다 계약단가가 낮게 형성되어 예산 불용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병무청은 향후 잠복결핵 위탁검사 예산 편성 시 단가 변동 추세를 보다 면밀히 반영하여 예산 과다 편성으로 인한 불용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연번 3번입니다.

시정요구명은 병역진로설계 지원센터 이용 활성화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현역병모집입니다.

지적사항은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이용률이 2024년 25.0%로 다소 낮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병무청은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방문 여건을 개선하고 통합적인 병무 행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센터 이용률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연번 4번입니다.

시정요구명은 국외병역자원 관리 실효성 제고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현역병입영입니다.

지적사항은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현재의 단순히 병역 이행 안내에 그치는 국외자원관리 사업 수행 방식으로는 국외병역자원 충원 규모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병무청은 저조한 국외병역자원의 병역의무 이행 제고를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 홍보 확대, 병역 이행 유인책 마련 등 국외자원관리 사업 수행 방식의 다각화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국외병역자원을 충원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도개선 의견이 계셨고 주의 의견이 계셨습니다.

연번 5번입니다.

시정요구명은 집합·대면 방식 전시업무교육 확대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병력동원소집관리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전시업무교육을 집합·대면 방식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고 전시업무교육 점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반영하는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병무청은 전시업무교육 실효성 증대를 위하여 집합·대면 방식 교육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에 전시업무교육 실적이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평가 반영 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페이지 연번 6번입니다.

시정요구명은 사회복지무요원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인원 감축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사회복지무요원 복무관리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사회복지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인원이 2019년 이후 매년 1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소집 완료자 대비 전시근로역 처분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병무청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사회복지무요원 수요 감소, 지역별 수급 불균형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인원을 감소시킬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페이지 연번 7번입니다.

시정요구명은 대체역심사위원회 사무국 조직 개편 방안 검토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대체역 편입 및 소집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대체역 편입신청 감소 등을 감안하여 대체역심사위원회 위원을 13인으로 축소하 바 있으나 사무국은 약 31명 규모의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병무청은 대체역심사위원회 행정 업무 소요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대체역심사위원회 사무국 조직 구성 및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페이지 연번 8번입니다.

시정요구명은 지하상황실 구축 사업 예산 전용집행 적정성 검토 및 재발 방지입니다.

관련 사업은 병무행정운영입니다.

지적사항은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지하상황실 구축은 국회가 2024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심의·확정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집행한 것으로 예산 전용 시 요구되는 사업 간 유사성, 재원 사용의 시급성, 기관운영 필수 경비 여부 등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지적과 별개로 지하상황실 구축은 비상 대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병무청의 시설 점검 및 개선 차원이었을 것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병무청은 지하상황실 구축 사업이 진행된 사유 및 경위를 조사하고 향후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예산 전용을 통해 추진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입니다.

제도개선 의견과 주의 의견, 시정 의견이 각각 계셨습니다.

연번 9번입니다.

시정요구명은 사회복지무요원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사업 실적 제고 필요 등입니다.

관련 사업은 병역의무자지원입니다.

지적사항은 사회복지무요원의 원격강좌 수강료·수수료 지원 실적이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원격강좌 수강료·수수료 지원 사업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매년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병무청은 보다 많은 사회복지무요원이 원격강좌 수강료·수수료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 강화 등 사업실적 제고 방안과 사업 수요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연번 10번입니다.

마지막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명은 병역의무자지원 사업 불용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은 병역의무자지원입니다.

2024년도 병역의무자지원 사업 예산 중 176억 원이 불용되어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의 정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사업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편성 정확성을 높여 사업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병무청장 홍소영 병무청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총 10건이 지적되었으 며 지적된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하시는 대로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지하상황실 구축 사업 예산 전용집행과 관련해서 정청래 위원님께서 시정을 주셨는데 이미 예산을 집행해서 상황실을 9층에서 지하 1층으로 이전 완료하였기에 원상복구가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를 감안해서 결정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예산 전용을 통해 추진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부승찬 위원님.

○부승찬 위원 짧게 할게요.

결핵 위탁검사와 관련해서 예산소위 때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편성단가를 좀 낮춰 달라. 그렇지요? 그런데 편성단가가 1만 6000원으로 계속 됐었어요. 그래서 삭감 의견을 냈었는데 그때 전 병무청장님이 뭐라 그랬냐면 본 위원이 얘기한 것대로 가면 그때 가서 사죄하겠습니다, 회의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편성단가를 1만 6000원으로 맞추고 있고 계약단가는 그것에 비해서 상당히 낮아요. 그러면 예산 편성단가를 낮추면 불용 자체가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1만 6000원을 계속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맞잖아요. 이게 추세대로 봤을 때는 편성단가가 1만 6000원…… 2022년부터 1만 6000원, 계약단가가 1만 5570원, 23년에는 편성단가 1만 6000원 그다음에 계약단가는 1만 4500원, 계속 낮아져요. 24년에 계약단가가 1만 2400원, 편성단가 1만 6000원. 이것 딱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 지적을 했더니 뭐라고 왔냐면 그때 가서 사죄하겠대요. 정확한 워딩이 ‘그때 가서 사죄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딱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병무청장 홍소영 예.

○부승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라든지 예측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이것과 관련해서도 병역의무자 이용률이 22년에 21%, 23년에 22%, 조금씩 올라가요. 24년에 25%인데 이게 센터 이용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무청장 홍소영** 일단 센터가 지방병무청과 접근성에서도 좀 문제가 있고 거리상의 문제가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운영 콘텐츠나 인지도 측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면 목표하는 게 있어요?

○**병무청장 홍소영** 예, 그래서 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앞으로는 접근성과 이용률 향상을 위해서 운영 콘텐츠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센터 운영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다음에, 제가 의견을 제출한 거니까 빨리빨리 갈게요.

국외병역자원 관리와 관련해서도 지금 보면 예산 현액 1억 3600만 원 중에 1억 1900만 원, 약 87.5%가 책자 발간, 병역의무자 출국 시 배부하는 안내문 제작, SNS 광고에 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 너무 소극적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이것에 비해서 자원 충원율은 좀 낮아요.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기대기 전시근로역 처분 있잖아요. 이게 소집 완료에 비해서 30%, 40%대에 머물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전시근로역 처분 인원을 감소시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병무청장 홍소영** 예, 강구하고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병무청장 홍소영** 예.

○**부승찬 위원** 그다음에 아까 대체역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자체가 13인으로 축소됐는데 사무국은 그대로예요. 31명 정원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병무청장 홍소영** 예.

○**부승찬 위원** 그런데 이게 절대적으로 감소한 거잖아요, 위원회 위원 수가. 그런데 사무국은 여전히 31명 유지하고 있고 예산 비용도 적습니다마는 초과 집행되었어요. 이런 부분들 좀 살펴봐 주시고요.

○**병무청장 홍소영** 위원님, 이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대체역심사위원회에 대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정이 되면 조직개편을 하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런데 8번 지하상황실 구축과 관련해서 이게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시급하고 긴급한 거였나요, 굳이 병역의무자지원 세부사업의 기타보전금 4억 2000만 원을 전용할 정도로?

○**병무청장 홍소영**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한테 꼭 필요한 사항이었는데 예산의 시급성이나 사업의 유사성 판단에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급한 거냐 이거지요.

○**병무청장 홍소영**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이런 것들은 불필요한 오해를 사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건데, 뭐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이게 불필요한 오해를 사잖아요. 정상적으로 예산 편성시켜 갖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계엄 관련해서 지하상황실을 병무청이 구축하는 것은 이게 정치인들 수

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병무청장 홍소영** 지금 정확한 사업 진행 사유와 경위에 대해서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가 끝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에서 이게 수강료나 수수료 지원이 상당히 저조해요. 그렇지요?

○**병무청장 홍소영** 예.

○**부승찬 위원** 한 자릿수예요.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 있게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강선영 위원님.

○**강선영 위원** 중복돼서 지적드린 것은 다 부승찬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제가 그 답변으로 같음하고, 5번 집합·대면 방식 전사업무 확대 및 자체평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을지연습이 최근에 끝났습니다. 병무청장님, 그렇지요?

○**병무청장 홍소영** 예.

○**강선영 위원** 병무청장님, 아까 제가 여기서 여쭙았는데 ‘병무청에 오래 계셨지요?’ 하니까 대전병무청장님 하셨다 그래서 질의하겠는데, 전시에 병무청의 업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무청장 홍소영** 전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병역을,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강선영 위원** 좀 전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데프콘 2가 격상되면 동원령 선포가 되고……

○**병무청장 홍소영** 예,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동원령 선포되면 각 수임군부대랑 협조해서 동원부대들은 동원을 시켜서 전방에 추진해 주시고, 동원사단들은요. 향토사단들은 향토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평상시에 군이 완전편성, 즉 완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감소편성 운영하는 부대들은, 감편부대들에 대해서 상비사단을 완편시켜 주려는 역할을 하지요?

제가 느끼는 아쉬움은 뭐냐 하면 제가 연합연습을 해 보면 느끼는 게 원래 데프콘이 격상되고 나면 그로부터 시간별로 전방에 장애물 설치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할 때 동원부대들이 빨리빨리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전시에 가장 안 되는 것 하나가 동원이에요, 동원.

그러면 그 업무를 해 주는, 동원령 선포되면 소집명령을 발령하고 이런 것들을 다 병무행정에서 해 줘야 되거든요. 실제로 이게 온라인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전시에 데프콘이 격상되면 어떻게 병력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전방으로 이동시켜 주고 어떻게 수임군부대까지 데려가는 이런 행정이 군과 병무청 그다음에 지자체 간에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이게 온라인 교육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병무청장님부터, 병무청에 있는 분들부터 평상시에 군을 현역이든 예비역이든 공익이든 입영하는 목적이 전시 대비인데 실제로 목적이 군에서 전시에 쓰려고 하는 인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군을 상시 유지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시에 정말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훈련이 좀 부

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때 제가 병무청이 얼마나 전시 대비 업무를 잘 발전시키고 있는지를 한번, 감사라기보다는 확인해 보고 싶고 어떤 게 우리가 법적으로 좀 보완이 되어야 될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부탁드립니다.

청장님부터 밑에 각 청에 있는 분들이, 데프콘이 격상되면 그때부터 완전히 동원령이 선포돼서 동원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러시아 보십시오. 동원이 안 되고 그래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 게 병무청의 본업이에요, 본업.

그래서 그 본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야 되고 전문성을 갖춰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잘 좀 구체화 계획 좀 발전시켜 달라. 그래서 평시업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병무청은 전시업무를 하는 주요 부서다.

두 번째는 종합상황실 이전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청장님께서 이번 정부 들어와서 임명됐지만 종합상황실 이전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행안부에서 지적을 받은 거예요, 그 전년도에. 지적을 받아서 이전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저는, 특정한 정권이 아니라 이게 지적을 받아서 그에 따른 감사결과에 어떤 행동한 것을 이것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매우 자극적입니다, 조사하고 있다.

종합상황실 이전한 것이 조사할 것이면 그러면 그 전 정부에서 했던 모든 일 한 것은 저희가 확인해 달라면 다 조사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나요?

제가 그래서 관련자료, 질의서 다 받았습니다, 여기. 9층에서부터 지하상황실로 갔는데 오히려 평수는 줄어들었고 기존에는 비디오 월, 회의용 테이블, 의자, 마이크, 노트북 있던 게 거기에 PC, IP전화기, 프린터…… 국가지도통신망 및 기타 방송장비 연결한 겁니다. 왜? 전시가 되면, 전시에 시설 운영하려면 방호시설도 갖춰야 되고 전시에 긴급한 상황조치를 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동원령이 선포됐을 때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통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지 왜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지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병무청이 그러면 평상시에, 어차피 현역병 입영하는 것 그것 병무청에서 안 하고 각 지자체에서 해도 되는, 위임해도 되는, 정말 어떻게 보면 패스하는 업무잖아요.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업무는 실제 전시에 그 임무를 책임지려고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한 기능이 너무 노출이 되어 있는 9층에 있으니까 지하시설에 방호시설을 갖춰서 해야 된다는 게 본업이라는 거지요.

병무청장님이 그렇게 조사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실제 이 임무를 해 갖고 9층에 있다가 지하층으로 이전한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잘못했나?

지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위원님들이. 왜냐하면 의심이 되니까. 그러나 병무청장님으로서 그것을 그렇게 조사하겠다고 발언하시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병무청장 홍소영**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저희 업무에 대해서 너무 잘 파악하시고 저희를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예산의 유사성이나 시급성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제가 필요하고 궁금하고 또 진위 여부를 알고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강선영 위원 청장님, 청장님이 직접 자기 수하에 있는 기관에 대해서 어떤 걸 확인하는 것을 조사라고 합니까? 조사라고 하십니까? 조사라는 것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기관이 있는 거고요, 감사를 하는 기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휘관 할 때 우리 부대에서 일어난 일을 조사라고 하지 않아요. 확인해 보겠다고 합니다. 저는 병무청장님의 그런 태도가 밑에 있는 직원들 간의 신뢰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확인이 됐든 조사가 됐든 감사가 됐든 상관없이 청장님의 태도는 그것에 대한 의문을 갖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방사청 좀 전에 했는데 방사청에서 모든 이·전용한 것에 대해서 방사청장이 모든 기관을 조사하겠다고 발언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황명선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강대식 황명선 위원님.

○황명선 위원 발언 안 하려고 했었는데 몇 말씀 드릴게요.

지난번 우리 회의 때 저도 그렇고 정청래 위원님도 그렇고 위법 전용 통한 지하상황실 구축과 관련돼서 내란 계엄 관련돼서 살펴봐 달라고 제가 요청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볼게요.

첫 번째는 예산에 대해 전용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에 대한 입장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치가 필요하고 다만 이와 관련돼서 왜 그렇게 NSC와 국정원을 통해서, 행안부를 통해서 모든 기관에 지하병커를 만들라고, 지하상황실을 만들라고 전부 다 지시를 했는데 병무청만 예산을 전용해서 신속하게 했어요. 모든 국가 기관들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

특히 작년 5월에 경호실 차장이었던 김종철 씨가 병무청장으로 부임을 해서 바로 그 직후 6월 달에 병무청과 기재부가 하루 만에 협의를 통해서 바로 그냥 이 사업이 7월 23일 날, 기재부에 예산 전용 신청한 지 단 하루 만에 승인 통보를 받고 이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공도 12월 3일 계엄 3일 전에 11월 30일 날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언론에서도 그런 의혹이 제기돼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런 내용과 관련돼서 병무청장께 철저하게 점검하고 조사하고 여기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선영 위원님이 왜 조사를 하나. 조사라는 표현 자체가, 예를 들면 우리 병무청에도 감사 부서가 있습니다. 감사가 조사를 하는 것이지요. 제가 논산시장 했을 때 우리 논산 시정과 관련돼서도 감사 부서에서 조사를 하거든요.

물론 병무청의 직원들을 위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 굉장히 국가적으로 엄중하게 의혹들이 제기되는 상황이니깐 정확하게 철저하게 병무청장께서, 병무청에 감사 부서가 있겠지요.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무청장 홍소영** 조사는 이미 시작했고요.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아무튼 이 내용과 관련돼서 많은 의혹들, 여러 가지 궁금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조사해서 보고를 꼭 해 주시고요.

저는 필요하다라고 하면 국방부 차원에서 나서서 감사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해가 없도록 왜 그랬는지 우리 청장께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더 질의할 위원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사, 확인 이 용어 자체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좀 전에 강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기관의 장으로서 부하직원이라든지 조직원 간의 신인과 신뢰 이런 문제를 위해서 확인이 됐든 조사가 됐든 하나의 어의 차이인데 그렇게 말씀해 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방금 황명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또 단체장으로서의 상황 자체를 그때는 그래 이야기하는 거고 이러니까 그게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용어 자체는 앞으로 청장님이 선택하셔서 잘……

○**황명선 위원** 위원장님, 잠깐 여기에 대해서 정정을 좀 하도록……

이게 내란과 관련된 의혹, 연관, 지하병커 가두려고 했던 이런 의혹들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병무청장으로서 왜 병커를 만들고 누가 지시를 하고 누가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했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지요. 이것을 무슨 직원들 일상적 삶 속에서 문제 제기를 받아 가지고, 지하병커가 아니라 그러면 확인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건 굉장히 국가적으로 많은 의혹을 받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지 이게 무슨 단지 확인 차원이다 이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내가 그렇게 확인이라든지 조사라든지 그 용어 자체에서 이야기 나오는 거지 청장으로서 수장으로서 하는 이야기, 황 위원님은 내란 이러시는데 예를 들어 감사를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하라 해 가지고 한 상황 이런 것들이 확인을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그때 다 나온다 하면 황 위원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굉장히 잘못되는 거지요.

○**황명선 위원** 아니요.

○**소위원장 강대식** 됐습니다. 이것은 둘이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이 자리에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다음에 보고를 한다 하니까 그때 한번 들어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무청장 홍소영** 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과 8번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요구를 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제도개선과 주의가 있습니다. 제도개선은 한 분 위원님이 하셨고 주의는 두 분 위원님이 했는데 이것은 주의로 가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가고.

연번 8번은 기예산이 다 사용돼 버렸고 이런 상황에서 좀 전에 청장께서 시정은 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없으니까 주의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임종득 위원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병무청 소관 결산에 대한 항목별 심사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심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병무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은 이제까지 심사한 대로 시정조치 요구사항 등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조치 요구사항 등에 관련된 문구 조정에 대해서는 관례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의결과 관련해서 병무청장께서 간단한 인사 있겠습니다.

○병무청장 홍소영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효율적 예산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병무청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결산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해당 위원회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없었으므로 별도로 논의할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병무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강대식 강선영 부승찬 임종득 황명선 황 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전문위원 서덕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방부

차관 이두희

기획조정실장 이영빈

군수관리관 이갑수

병무청

청장 홍소영

기획조정관 문경식

병역자원국장 김인환

입영동원국장 최정효

사회복무국장 임재하

방위사업청

차장 강환석

기획조정관 홍미루

국제협력관직무대리 박애서

방위산업진흥국장 김일동

헬기사업부장 고희석

함정사업부장직무대리 지상혁

우주통신사업부장직무대리 김동춘

첨단기술사업단장직무대리 정재준

감시전자사업부장 권영철

유도무기사업부장 오성식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이건완

국방기술품질원

원장직무대리 장봉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 손재홍